

2022년(1-2분기) 학생인권 동향보고



1. 주요 동향
2. 결쟁례
3. 언론 보도

○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0.1.14.>

제16조(피선거권)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1.18.>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중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1.18.>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중략)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1.>

○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

- 방정환, 1922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날’ 선포
- 방정환, 1923년 소년운동협회 조직,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 선포

• 소년운동의 3개 기초 조항(최초의 ‘어린이해방 선언’)

- ①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 ②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③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해 기념
- 어린이날은 1975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

※ 내용 참고

(사)방정환연구소 홈페이지, 방정환 연보 및 작품(<https://url.kr/gh5wjp>)

국제아동인권센터 블로그, ‘어린이날 100주년 : 어린이 어원+어린이날의 역사’(<https://url.kr/fiusnl>)

○ 타 지역 주요 동향

- 울산교육청, 학생인권지원센터 3월부터 운영(KBS NEWS, 2022. 2. 21. 보도 근거)

○ 기숙사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22. 2. 22. 결정)

- 기숙사생들에게 공휴일 07:30-13:50을 제외한 시간에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달간 압수하는 기숙사 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 것이라 판단

-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 기숙사 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을지라도,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움
-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인권위원회 2022. 5. 11. 보도자료 참고(<https://url.kr/6emac8>)

○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국가인권위원회 2022. 3. 29. 결정)

- 헌법 제10조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의 취지에 따른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아동 존엄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 라는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의견 표명

-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인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린이’ (요린이, 부린이, 잼린이 등)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미숙하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에 기반 한 것임
- 최근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을 무시하는 맥락을 지닌 이러한 표현이 인터넷상으로 급속하게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아동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심어주고, 편견과 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강화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아동 또한 자신을 왜곡, 무시,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이로 인해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 2022. 5. 3. 보도자료 참고(<https://url.kr/5ezr6b>)

○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두발 규제**(국가인권위원회 2022. 3. 29. 결정)

- 학교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고, 위반 시 최대 1개월 동안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후의 일상 생활까지 제약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판단됨
- 남학생의 경우 상고머리형으로 두발의 앞·옆·뒷머리와 구레나룻의 길이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내 생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사생활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성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봄

※ 결정문 전문 보기(<https://url.kr/zyf5it>)

-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의 이해
 -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으로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위 결정에서)

○ **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22. 3. 29. 결정)

- 피진정학교에서 기숙사생들에게 평일 30분,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30분의 외출만을 허용하고 외박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가족들과 사실상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 학교에서 기숙사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 시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은 인정하나, 피진정학교 전교생 중 10% 가량은 집에서 통학하고 있으므로 기숙사생들의 외출과 외박만 제한하여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에 대해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 2022. 5. 6. 보도자료 참고(<https://url.kr/sz8dtv>)

권리 유형	주요 언론 보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말 서툴러” 다문화 학생 입학거부 못한다(세계일보, 2022.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외국인·다문화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과 전학, 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정하게 돼 한국어가 서투른 이유 등을 내세워 이 학생들의 전학과 편입 등을 거부해온 관행이 사라질 것,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맞았다고 “내가 네 친구야?” 학생 머리채 잡은 축구강사(연합뉴스, 2022.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지법은 학생이 던진 공에 반복해서 머리를 맞게 되자 머리채를 잡고 욕설한 중학교 축구부 강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 고교생들 상습 학대 행정실장 벌금형 “인권 침해 개선율”(뉴시스, 2022. 6. 9. 등 다수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법은 모 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 A씨는 담배를 피운 학생 5명의 엉덩이와 어깨를 죽도로 여러 차례 때리고 담배를 5개비 가량씩 입에 물린 뒤 떨어뜨리면 죽도로 계속 때리고 담배를 모두 피우게 강요하였으며,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의 엉덩이, 손바닥을 막대기로 마구 때리기도 함
학습에 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이후 4억 명의 아이들 ‘교실 밖으로’(경향신문, 2022.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23개국에서 학교 전면 폐쇄조치를 유지하면서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이 4억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유엔아동기금이 30일 밝힘
개성을 실현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당한 학생 속옷규정 없앤다...서울 52개교 생활규정 개정(이데일리, 2022.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교육청은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거나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속옷에 벌점을 부과한다’는 식의 생활규정을 운영한 52개 중·고교가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했다고 밝힘
사생활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휴대전화 허용 어디까지? 인권위가 본 ‘3대 원칙’(KBS NEWS, 2022. 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와 동시에 맡겨 놔다 하교할 때 돌려받는 휴대전화 ... (중략) ... 인권위는 한결 같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 - 수업 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진 합리적이지만, 쉬는 시간에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 ... (중략) ... 관련 규율을 만들 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으로 정할 것도 권고

권리 유형	주요 언론 보도
급식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식선택권 달라” 학생들 진정...인권위 “급식체계 개선해야”(연합뉴스, 2022. 2. 10.) -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식단을 보장받도록 급식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라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 등에게 표명 - 다만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비건(Vegan,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